

오피니언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이 병수



격동하는 현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정치가들은 선거 때 유권자들에게 고개를 숙이면서 잘 모시겠다고 약속을 하지만 일단 당선되면 유권자는 뒷전이고, 사야 주구 또는 소속 정당의 이해타산에 따라 행동한다.

야당도 집권당이 무리하게 과속할 때 절제하는 견제 정치가 아니라 감싸고 엊그제는 정치제도가 빠져나가는 것에 실망한 유권자들은 새로운 정당, 정치세력의 출현을 갈망하고 있다.

과거에 유권자들은 선거철에만 정치가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었고, 평상시에는 여론이라는 이름으로 대중매체를 통해서 정치에 의견을 피동적으로 반영하는데 그쳤다. 이제는 소셜미디어의 등장으로 이런 모델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경제생활에서 “소비자는 왕이다.”라는 대접을 받아 온 유권자들은 정치면에서도 같은 대접을 바라고 있다. 소셜네트워크는 이런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 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등장했다.

소셜네트워크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며, 어떻게 사용되느냐는 그곳에 참가한

사람들의 이슈에 대한 지식과 대화에 대한 태도에 달려있다. 다른 관점을 배우려고 하는 자세라면 담론과 소통의 장이 될 수 있고, 자신과 같은 생각만을 접하려고 한다면 선동의 매개체로 전락할 것이다.

얼마 전 국회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 통과된 후 각계 반응이 다르다.

담화의 광장이 필요하다

어떤 이는 이제는 미국시장에서 한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고 진출하여 힘을 마음껏 써 볼 기회가 될 것처럼 생각하고, 어떤 이는 좋은 세상이 다 끝나고 이제는 미국 기업의 냉혹한 이윤추구 때문에 한국 산업이 거칠날 것이라고 얘기한다.

필자 생각은, 총체적인 경제적 성장을 더 빨라질 것으로 본다. 대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아질 것이고, 수출이 늘어나고,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기업 내지는 생산자의 체질이 강화될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고도의 경쟁에서 살아남는 기업에서 고용의 급속한 증대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동시에 경쟁에서 지는 기업이나 산업은 약화내지는 사라짐으로써 실업자를 발생시킬 것이다. 또한 소비자들은 공급자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양질의 재화와 서비스를 받는 상황이 올 것이다.

초기에는 가격 저하로 소비자가 혜택을 누리겠지만, 소수기업이 시장을 지배할 경우 가격이 오르고, 만약 기업이 만족할 만한 이익을 거둘 수가 없다고 판단하면 서비스를 거부하는 부작용도 예상된다.

최근에 미국에서는 에이티 앤 티(AT&T),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핸드폰 통신회사(T-Mobile, 네 번째로 큰

핸드폰 통신회사)가 연방정부로부터 반독점 문제로 합병승인에 차질이 예상되자 합병을 포기했다.

한국에서 독과점을 막기 위해서나 또는 사회적 약자나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서 정부가 외국기업을 효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을지는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 때문에 의문이다.

한 사건이 모두에게 똑같이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한미FTA가 한국 전체에 단순하게 이익 또는 손해가 된다고 결정할 일 이 아니라 한국 국민 누구에게 어떤 이익이 되고, 어떤 손해가 되는지 살펴야 한다.

또 단기적인 관점과 장기적인 관점에서

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이익 보는 측과 손해 보는 측의 부의 재분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라지는 산업에서의 임여 노동을 어떻게 재훈련시켜 부흥 또는 신생 산업으로 이동을 유도할 것인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우리 사회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점이다. 그것이 성장이라면 수출을 통해서인지, 내수의 진작을 통해서인지, 언제까지나 성장주구를 할 것인지, 성장과 경쟁 중심의 경제정책이 한국산업과 국민에게 최선의 정책인지에 대해 따져봐야 한다.

분배 중심정책은 재정적자와 경제체질의 약화를 가져오는지 등도, 모든 국민이 충분히 논의한 후에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대한 결점을 했어야 마땅하다. 정치가들은 다차원의 문제를 일차원적으로 해결하려 하고, 소통보다는 단절 속에서 행동하는 유권자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는 짧은 의견을 달기는 적당하지만 심도 있는 논의를 다루기에는 부족하다. 전상 전통적인 대중 매체인 신문이나 방송, 또는 인터넷 매체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뤄 줌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쌓고 더 많은 담론의 광장을 제공한다면 국민을 거리의 광장으로 내모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미 일란(Elon) 대학교 언론학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의료 칼럼



김 수관

광주를 미래형 치과산업 메카로

우에 치과분야의 수입 의존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약 1조 5000억 규모로 주산되는 국내 시장과 수입조원 규모의 해외시장에서 우리나라 치과산업이 경쟁력을 갖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우리나라는 국토 단위 면적당 치과의사 및 치의료 서비스 보유율도 세계 최고 수준이며 높은 시장성장률, 서비스산업의 높은 기술수준을 갖추고 있어 국내 치과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이다. 그러나 치과 기자재산업의 낮은 기술수준, 기자재 R&D 및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발전의 저해 요인이 존재하며, 이러한 산업 구조 개선을 위해 국가적인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륙권 첨단치과산업밸트 구축을 위해 광주와 대구가 함께 치과클리닉 사업 유지를 위해 힘쓰고 있다. 클러스터란 산업단지에 역동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최첨단 지식과 기술을 확산시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비해 우리 지역은 업체와 대학·병원간 서로 협력·개발하는 연구 중심으로 선회해야 할 것이다. 조선대는 이미 수출 전문사와 협력해 인도네시아 등지에 임플란트 기술 등을 전수하고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이 같은 전략의 성공을 위해서는 R&D 비용을 대폭 증액해야 할 뿐 아니라 대학교와 중앙업체가 네트워크를 형성해 R&D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광주 지역은 전국 최고의 인적 인프라를 바탕으로 치의료용 소재부품 분야 전국 최대의 기술 및 원천기술 집약지이다. 따라서 비수도권 대도시 중 치과의료기기 산업 육성의 적절성이 제일 높은 곳은 바로 광주이다.

광주의 치과산업은 본격적인 발전을 시각하는 단계로써 산업적 기반이 다소 취약하지만 최근 창업 및 업종전환이 활성화되고 있다. 또 치과용 정밀장비 및 부품 지역

혁신센터 등 치과산업 관련 연구·지원기관 13곳이 구축돼 치과산업의 혁신기반도 매우 양호하다. 특히 광산업의 핵심 집적지로써 치과산업과의 연계발전 잠재력 또한 풍부하다.

광주의 치과 소재 부품 산업과 대구의 임플란트 산업을 축으로 한 클러스터의 조성은 단기적으로는 아시아 시장을 시작으로 중장기에는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치과산업 혁신 구축을 이루게 될 것이며, 치과 산업의 위상을 강화할 것이다.

이 같은 첨단 치과산업의 개발은 에너지, 전자, 재료 등 거의 모든 산업분야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향후 나노·바이오 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이와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수천 명의 고용창출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해외 수출용 치과산업의 전진기지를 구축하고 글로벌 마케팅 지원체계를 확립해 치과산업 메카로서 의료관광 활성화와 국내 치과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클러스터의 조성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조선대 치과대학원장)

기고



어른들이 떠넘긴 한미FTA

한 미안의 아젠다로 보인다. 먼저 한·미 FTA 체결 목적을 보자.

우리나라나 미국 모두 자국의 제품과 서비스를 보다 많이 수출하기 위해 관세를 없애 거래를 자유롭게 하자는 것이 한·미FTA 체결의 가장 큰 목적으로 알고 있다.

한·미FTA 체결 목적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한·미FTA를 체결하면 세계 최대시장을 선점할 기회이고, 일자리가 늘어나며, 장바구니 부담이 적어지고, 우리 기업과 국민이 조속한 비준을 기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한·미FTA가 체결되면 유리한 것과 불리한 품목이 공존해 농업과 소상공인 등 일부 분야는 엄청난 타격을 받는다고 해야 맞는 말이다. 가격 경쟁이 안 되므로 당연히 우리 농산물들은 오히려 미국에 팔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반면, 우리는 FTA 체결의 유·불리, 장·단점, 국익에 앞서는 가치 등을 자세히 국민을 상대로 설명하고, 고민하지 않은 것 같다.

전문가들 중에는 물건을 많이 팔 수 있다

는 측면에서만 봐도 미국이 10이라면, 우리

나라는 3 정도에 그치는 우리에게 매우 불리한 협상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수출에 그렇게 유리한 것이라면 미국은 거대한 수출시장인 중국과 일본, 인도, EU 등 거대국가들과는 왜 FTA를 하지 않고 있을까? 미국에게 도움이 덜 되거나 아예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일 것이라고 짐작된다.

FTA를 체결하면 일자리가 늘고 물가가 싸진다는 근거도 부족하고 특히, 극히 일부 기업과 국민이 조속한 비준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일반화해 정부는 마치 전 국민이 간접히 바라고 있는 듯 호도하고 있다. 서로의 논의는 등의 비준의 절차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4년 이상 긴 시간을 삼사숙고, 의회와 정부가 의논해 합의점을 찾은 뒤 우리나라로 공을 날렸다. 그것이 FTA라는 무거운 짐을 후세에게 물려 줄 어른들의 최소한의 역할이다. 아버지의 빚을 빼 많게 될 자식들의 책임이다. 아버지의 빚을 빼 많게 될 자식들의 책임이다. 아버지의 빚을 빼 많게 될 자식들의 책임이다.

씨 왔지만 몇년 전부터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며 쓰고 있다. 쳐들은 다소 불편함을 느꼈지만 이제는 습관이 되어 종이를 아끼고 환경을 보호하게 됐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호주머니 속에 손수

걸지히 한미FTA 협정문 속에 무엇이 담겼고, 담긴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FTA의 진정한 뜻을 알고 있을까? 미국은 4년이 넘게 고민하고 논쟁했는데 왜 우리는 그 과정을 생략했을까? 미국에서 넘어 오자마자 서둘러, 그것도 날치기로 국회에서 통과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국회에 최루탄을 뿐이었다는 사실보다 더 심각한 일은 바로 그것이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논의의 대상이자 중요한 한 죽인 애(野)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여(與)가 의사봉만 두드렸다고 밟혔다는 것은 아니다. 한·미FTA는 재협상의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

그 자체로 불완전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따라서 불완전하고 부실한 한·미FTA는 재협상 후 정식 발효되거나, 한국 내에서 완전한 동의를 구할 때까지 발효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FTA라는 무거운 짐을 후세에게 물려 줄 어른들의 최소한의 역할이다. 아버지의 빚을 빼 많게 될 자식들의 책임이다. 아버지의 빚을 빼 많게 될 자식들의 책임이다. 아버지의 빚을 빼 많게 될 자식들의 책임이다.

그것도 한 장도 아닌 두세 장씩이나 마구

뱉어 쓰고 때로는 더 많이 뺏어서 가져가기도 한다.

앞으로는 모든 건물 화장실 세면대에 간단한 배경설명과 함께 손수건을 쓰도록 권유하고 주머니에 손수건 한 장씩 넣고 다니도록 홍보나 캠페인을 벌였으면 한다.

▲최남이·광주 북구 각화동

화장실 종이 휴지 대신 손수건 쓰기 운동을

써 왔지만 몇년 전부터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며 쓰고 있다. 쳐들은 다소 불편함을 느꼈지만 이제는 습관이 되어 종이를 아끼고 환경을 보호하게 됐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호주머니 속에 손수

걸지히 한미FTA 협정문 속에 무엇이 담겼고, 담긴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앞으로는 모든 건물 화장실 세면대에 간단한 배경설명과 함께 손수건을 쓰도록 권유하고 주머니에 손수건 한 장씩 넣고 다니도록 홍보나 캠페인을 벌였으면 한다.

▲최남이·광주 북구 각화동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시 설

‘꼼수’로 낮춘 물가 국민이 신뢰하겠는가

통계청이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안을 발표했으나 체감물가와 괴리를 더욱 커운 ‘꼼수’에 불과해 민족을 사고 있다. 국제세계 폭등으로 물가지수를 크게 끌어올린 금반지 폐고, 적용 시기도 당초 이달에서 11월로 앞당김으로써 인위적으로 물가상승률을 떨어뜨렸다는 것이다.

물가지수 개편은 경제·사회 변화를 반영해 조사 품목 등을 5년마다 조정하는 것으로, 이번 개편에 따라 올 1~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4%에서 4%로 낮아지게 됐다. 이로 인해 11·12월을 포함해 올 연간 물가상승률은 물가안정 목표인 연 4%를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금반지 제외로 물가상승률을 낮추고자 노력하고 있다.

금반지 개편은 경제·사회 변화를 반영해 조사 품목 등을 5년마다 조정하는 것으로, 이번 개편에 따라 올 1~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4%에서 4%로 낮아지게 됐다. 이로 인해 11·12월을 포함해 올 연간 물가상승률은 물가안정 목표인 연 4%를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난방요금, 전기요금 등 치솟는 물가

신 넓은 14K 미만 금제품 등 장신구가 소비자물가를 끌어올린 효과는 0.02% 포인트에 불과했다. 또 값이 크게 오른 쌀은 소비감소를 이유로 가중치를 14에서 6.2로 낮췄다.

가중치·품목변경 등 모든 게 물가상승률을 낮추는 쪽으로만 적용했다. 결국

금반지 개편으로 0.2%포인트, 품목·가중치 조정으로 0.12%포인트, 기하평균식 적용으로 0.02%포인트의 물가상승률을 낮췄다. 반영 시기를 1개월이나 앞당긴 것도 물가상승률 관리를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난방요금, 전기요금 등 치솟는 물가가 서민생활을 압박하는데 정부는 고작 물가지수를 주물러 ‘작시효과’만 노리고 있는 것이다. 학습하기 째 없는 일이다. 가뜩이나 발표물과 체감물가가 같은 것이다.

정부는 금반지 제외로 물가상승률을 낮추고자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금반지 대회복해야 할 것이다.

광주교육청 예산 편성·집행 ‘줄속’이라니

광주시교육청이 민간단체 이전 사업

을 추진하면서 심사·결산도 없이 허술

하게 예산을 집행해 논란이다.

교직원 업무 경감 예산도 충분히

줄어들었지만 노동부는

</div